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20
----------	-------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안규백 · 강대식 · 강득구
최인호 · 임종성 · 위성곤
박덕흠 · 이상현 · 김수홍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8,797건에 달함에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하여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위 기간 개최한 47건의 회의도 범행 및 수사 당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기준이 자의적으

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개결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함(안 제4조제4항).

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7.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범죄로 본다.

제3조(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이 법은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상정보의 공개) ①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직업 및 직장
5. 사진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상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개기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신상정보 공개의 예외)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구체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무죄판결과 보상) ①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